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첫 관문 넘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12년 만에 처리 6·3 地選때 원포인트 개헌 논의 탄력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첫 관문을 넘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일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꼽혀 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주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약 12년 만에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간부 및 공공기관장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 후 환영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6·3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우원

석 국회의장은 이를 위한 국민투표제 보완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헌 논의의 '첫 단추'를 꿰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으로 개헌 절차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향후 국회 개헌안 의결 여부와 국민투표 일정이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5·18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민회의대회를 열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결의대회에는 우원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의 헌법적 계승을 촉구했다.

이들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국회 헌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서도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姜시장 "통합은 新독립·新균형발전" 金지사 "통합특별시로 대도약 선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도약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인(In) 서울이 아니라 인(In) 광주, 인(In) 전남의 삶이 펼쳐질 때 그것이 바로 신독립이자 신균형발전이고 신대한민국"이라며 "3·1운동의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대한독립이었듯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 일자리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 좋은 병원, 좋은 공연과 쇼핑을 찾아 더 이상 서울을 가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사람이 돌아오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 일자리가 생겨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3·1운동 정신 계승으로 규정하며 "3·1운동의 정신이 독립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독립은 균형발전의 정신"이라며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 감내중앙강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통합과 도약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사에서 "3·1절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하나 된 호남인의 기개, 끝내 지켜낸 조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라며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이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나라의 위기마다 하나로 뭉쳐 일어난 땅이 바로 전남과 광주"라며 "3·1운동에서 민주화, 헌정 수호까지 이어진 하나됨의 정신이 오늘의 통합과 도약의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천년을 함께한 한뿌리 공동체"라며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대부흥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1면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서 계속

◇'통합의 정신' 살리는 시민배심원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종 5명을 대상으로 치러질 본경선 방식이다. 공관위는 단순 여론조사나 권리당원 투표를 넘어, 속의 민주주의 모델인 '시민배심원제'를 최고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경선 흥행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토론회 및 순회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주·전

남 사·도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후보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민배심원제'는 무작위 추출이나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와 난상 토론을 참관하고, 질의응답 등 심층적인 속의 과정을 거친 후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단순한 인지도 투표를 벗어나 배심원들이 마치 재판의 판결을 내리듯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보의 이미지나 인지도, 조직력보다는 실질적인 행

정 능력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충분한 토론과 속의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일반 여론조사 경선보다 물리적 시간·예산이 크게 소모된다. 특히 무작위 추출을 하더라도 결국 참여 의사가 있는 적극 관여자들만 모일 확률이 높다는 점, 배심원 선정 과정이나 현장 분위기 추도를 위해 각 캠프가 음성적으로 지지자들을 배심원단에 침투시키는 '조직 선거'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한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고흥 출신 박흥근

해수부 장관 후보엔 황중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의 박흥근 의원을 지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각종 의혹 끝에 지명이 철회된 이혜훈 전 후보자와 정반대로 이번엔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측근 인사를 발탁했다.

고흥 출신인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측근 그룹의 한 명으로 꼽힌다.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고,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은 정책·예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수석은 박 후보자에 대해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중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 등이 발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속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번호사를 나란히 지명했다.

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의과대학 인문과학 교실 주임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본사사령

◇승진 ▲김재정 편집국 정치부 부국장 ▲윤재광 " 편집부 부국장대우 ▲김애리 " 사진부장 ▲홍철 " 뉴미디어부장 ▲최효은 " 편집부 차장 ▲하민영 " " 차장 ▲박선옥 " 지역특집부 차장 ▲임국락 경영지원국 차장 ▲박상진 편집국 뉴미디어부 차장대우 (3월3일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합의) 판결 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양성)
피 고 인 장혜린
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양성) 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는나의 점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6. 2. 20.
판사 김 송 현

-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 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여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료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영암군 공고 제2026-380호

영암 '월출산 스테이션F'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암군에서 영암읍 남동리 - 개신리 일원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월출산 스테이션F」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14조, 같은 법 시행령 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6일
영 암 군 수

■ 월출산 스테이션F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영암군수(건설교통과) 나. 주 소: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영암 지역개발사업 나. 명 칭: 월출산 스테이션F 기반시설 조성사업
3. 사업예정지 가. 위 치: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동리 - 개신리 일원 나. 면 적: 92,049.4㎡
4. 내 용: 도로개설 및 확장(정비) - L=4.5km, B=11-18m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명세서: 개제생략(별첨자료 참조)
6. 광범기간 및 장소 ○ 정 소: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영암읍사무소 ○ 기 간: 2026. 02. 26. ~ 2026. 03. 26. (20일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영암군 홈페이지(https://www.yeongam.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시시스템(https://www.eiaass.go.kr/)에 등재
7. 주민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기 간: 2026. 02. 26. ~ 2026. 03. 26. (20일간) ○ 방 법: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건설교통과(061-470-248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